

바른사회시민회의 貴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2015. 11. 24

REALMETER

# 요약

- 2015년 11월 20일(금), 21일(토) 2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①現 감청 대테러활동 불가상황에 대한 인지, ②중대범죄 법원심사 전제 감청에 대한 인식, ③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 벌금부과에 대한 태도, ④통신업체 감청설비 구축 여부에 대한 태도, ⑤감청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⑥휴대전화 감청 법안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함.
- 現 감청 대테러활동 불가상황 인지 조사 결과, 미인지 의견이 61.5%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인지 의견은 38.5%로 나타나, 미인지 의견이 인지 의견보다 23.0%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중대범죄 법원심사 전제 감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중대범죄로 한한 감청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68.6%으로 나타났고, ‘중대범죄라도 감청 불가’ 의견은 16.6%에 불과해, 3배 이상의 의견 차이를 보임.
-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 벌금부과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벌금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54.0%, ‘벌금 미부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5.0%로 나타나, 벌금 부과 의견이 벌금 미부과 의견보다 29.0%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통신업체 감청설비 구축 여부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중 6명 이상인 64.9%로 조사된 반면,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9.0%로 3배 이상의 의견 차이를 보임.
- 감청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중 6명 이상인 64.6%로 조사된 반면,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4.1%에 그쳐 2.5배가량의 의견 차이를 보임.
- 휴대전화 감청 법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 제정’ 의견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제정(29.4%)’, ‘내/외국인 모두 휴대전화 감청을 해서는 안됨(18.6%)’ 순으로 조사됨.
- 본 조사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기준, 전국의 성, 연령, 권역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표집 했으며, 인구비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 연령, 권역 기준으로 ‘반복 비례 가중법’ (RIM, random iterative method)으로 사후 가중함.



##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	5
2. 조사 내용 .....	6
3. 응답자 특성 .....	7

## 제2장 범죄수사 관련 통신감청 인식

1. 現 감청 대테러활동 불가상황에 대한 인지 .....	9
2. 중대범죄 법원심사 전제 감청에 대한 인식 .....	12

##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인식

1.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 벌금부과에 대한 태도 .....	16
2. 통신업체 감청설비 구축 여부에 대한 태도 .....	19
3. 감청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	22
4. 휴대전화 감청 법안에 대한 인식 .....	25

## 부록1. 통계표

## 부록2. 설문지

# 1 조사 개요

# 제 1 장

# 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조사대상	전국 거주 19세 이상 남녀
조사기간	2015년 11월 20일 ~ 11월 21일
표 본 수	최종응답 1,000명
응 답 률	3.8%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표집방법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통계보정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권역 별 사후 가중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전화 (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조사기관	(주)리얼미터

## 2. 조사 내용

<p>범죄수사 관련 통신감청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감청 대테러활동 불가상황에 대한 인지</li> <li>• 중대범죄 범원심사 전제 감청에 대한 인식</li> </ul>
<p>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 벌금부과에 대한 태도</li> <li>• 통신업체 감청설비 구축 여부에 대한 태도</li> <li>• 감청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li> <li>• 휴대전화 감청 법안에 대한 인식</li> </ul>
<p>인구 통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전국 7개 권역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①서울, ②경기·인천</li> <li>- 충청권: ③대전·충청·세종</li> <li>- 강원권: ④강원</li> <li>- 영남권: ⑤부산·울산·경남, ⑥대구·경북</li> <li>- 호남권 및 제주: ⑦광주·전라·제주</li> </ul> </li> <li>• 연령: 5개 (19세 이상-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li> <li>• 성: 2개 (남성과 여성)</li> </ul>

### 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 전 체 ◇		1000	100.0
▣ 성 ▣	남 자	496	49.6
	여 자	504	50.4
▣ 연령 ▣	19세 이상 ~ 29세 이하	177	17.7
	30대	185	18.5
	40대	214	21.4
	50대	198	19.8
	60세 이상	226	22.6
▣ 지역 ▣	서울	202	20.2
	경기 · 인천	293	29.3
	대전 · 충청 · 세종	103	10.3
	강원	30	3.0
	부산 · 울산 · 경남	157	15.7
	대구 · 경북	102	10.2
	광주 · 전라 · 제주	113	11.3

## 2 범죄수사 관련 통신감청 인식



##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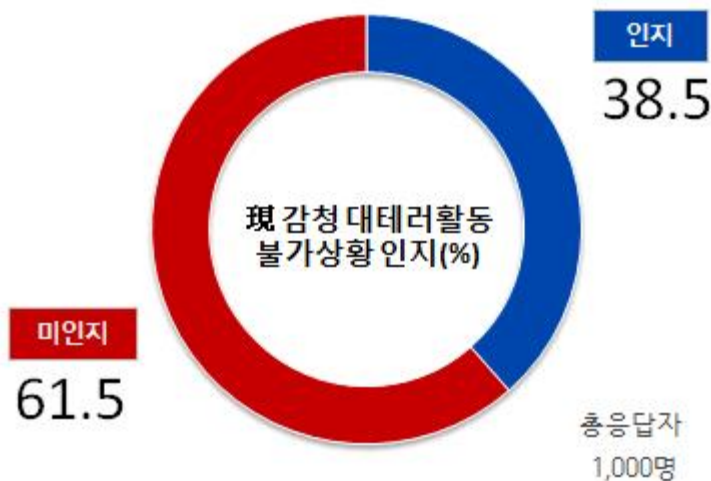
# 범죄수사 관련 통신감청 인식

### 1. 現 감청 대테러활동 불가상황에 대한 인지

#### ◆ 전체 분석

#### 문1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대형 테러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법령미비로 용의자에 대한 합법적 휴대폰 감청과 대테러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現 감청 대테러활동 불가상황, 인지 38.5% vs 미인지 61.5%

-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미비로 용의자에 대한 합법적 휴대폰 감청과 대테러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미인지 의견이 61.5%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인지 의견은 38.5%에 불과함. 미인지 의견이 인지 의견보다 23.0%p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 모든 계층에서 미인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미인지 응답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65.9%)과 광주·전라·제주(65.9%)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77.3%)에서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인지 의견은 대전·충청·세종(47.4%)과 40대(44.4%)에서 높게 나타남.

n = 1000, 단위: %

보기 구분	인지	미인지
◆ 전체 ◆	38.5	61.5

## ◆ 세부 분석

### ● 지역

n = 1000, 단위: %

보기 지역	인지	미인지
◇ 전체 ◇	38.5	61.5
서울	37.7	62.3
경기·인천	37.8	62.2
대전·충청·세종	47.4	52.6
강원	45.2	54.8
부산·울산·경남	34.1	65.9
대구·경북	42.7	57.3
광주·전라·제주	34.1	65.9

- 대부분 지역에서 미인지 의견이 인지 의견보다 우세했고,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인지 의견(47.4%) 과 미인지 의견(52.6%)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남.
- 미인지 의견이 모든 지역에서 우세한 가운데,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라·제주에서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서울(62.3%), 경기·인천(62.2%), 대구·경북(57.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인지 의견은 대전·충청·세종(47.4%)에서 가장 높고, 이어 강원(45.2%), 대구·경북(42.7%)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연령

n = 1000, 단위: %

보기 연령	인지	미인지
◇ 전체 ◇	38.5	61.5
19~29세	22.7	77.3
30대	40.0	60.0
40대	44.4	55.6
50대	40.4	59.6
60세 이상	42.3	57.7

- 모든 연령층에서 미인지 의견이 우세함.
- 미인지 의견은 20대(77.3%)에서 70%를 넘었고, 이어 30대(60.0%), 50대(59.6%), 60세 이상(57.7%), 40대(55.6%)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인지 의견은 40대(44.4%)에서 가장 높은 데 이어 60세 이상(42.3%), 50대(40.4%), 30대(40.0%)에서 40%이상을 기록해 높게 나타남.

● 성

n = 1000, 단위: %

보기 성	인지	미인지
◇ 전체 ◇	38.5	61.5
남성	44.0	56.0
여성	33.1	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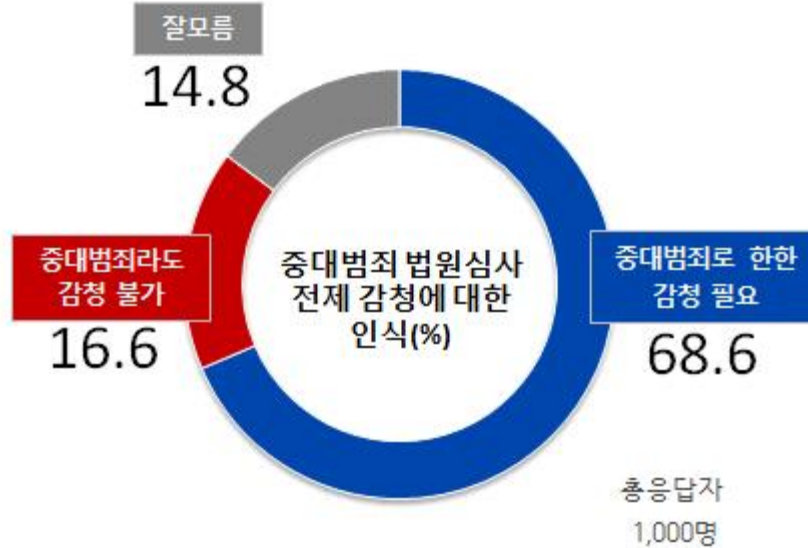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미인지 의견이 우세함.
- 미인지 의견은 여성(66.9%)이 남성(56.0%)보다 10.9%p 높고, 반면 인지 의견은 남성(44.0%)이 여성(33.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 중대범죄 법원심사 전제 감청에 대한 인식

### ◆ 전체 분석

문2

법원은 중대범죄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감청허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확인된 중대범죄를 감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청에 대한 인식, 중대범죄로 한한 감청 필요 68.6% vs 중대범죄라도 감청 불가 16.6%

- 중대범죄 법원심사 전제로 감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대범죄로 한한 감청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중 약 7명인 68.6%으로 나타난 반면, '중대범죄라도 감청 불가'라는 의견은 16.6%에 불과해, 3배 이상의 의견 차이를 보임. '잘 모름'은 14.8%.
- 모든 계층에서 '중대범죄로 한한 감청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6.9%)과 부산·울산·경남(75.1%)에서 70%를 넘었고, 연령별로는 50대(79.0%)와 30대(78.1%)에서 70%대로 높게 나타남. 반면, '중대범죄라도 감청 불가하다'는 의견은 서울(22.7%)과 20대와 40대(25.7%)에서 높게 조사됨.

n = 1000, 단위: %

보기 구분	중대범죄로 한한 감청은 필요	중대범죄라도 감청은 불가	잘 모름
◆ 전체 ◆	68.6	16.6	14.8

◆ 세부 분석

● 지역

n = 1000, 단위: %

보기 지역	중대범죄로 인한 감청은 필요	중대범죄라도 감청은 불가	잘 모름
◆ 전체 ◆	68.6	16.6	14.8
서울	62.9	22.7	14.4
경기·인천	69.7	13.3	17.0
대전·충청·세종	76.9	17.2	5.9
강원도	67.7	16.8	15.5
부산·울산·경남	75.1	19.5	5.4
대구·경북	66.8	15.7	17.5
광주·전라·제주	61.6	10.5	27.9

- 모든 지역에서 중대범죄로 인한 감청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대전·충청·세종(76.9%)과 부산·울산·경남(75.1%)에서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경기·인천(69.7%), 강원(67.7%)등의 순으로 모두 60%대로 높게 나타남.
- 중대범죄라도 감청 불가하다는 의견은 서울(22.7%)에서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19.5%), 대전·충청·세종(17.2%) 등의 순임.

● 연령

n = 1000, 단위: %

보기 연령	중대범죄로 인한 감청은 필요	중대범죄라도 감청은 불가	잘 모름
◆ 전체 ◆	68.6	16.6	14.8
19 ~ 29세	49.8	25.7	24.5
30대	78.1	11.7	10.3
40대	68.7	25.7	5.6
50대	79.0	10.2	10.8
60세 이상	66.6	10.5	23.0

- 모든 연령층에서 중대범죄로 인한 감청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함.
- 중대범죄로 인한 감청은 필요하다는 의견은 50대(79.0%)와 30대(78.1%)에서 70%를 넘었고, 이어 40대(68.7%), 60세 이상(66.6%), 20대(49.8%) 순으로 나타남.
- 중대범죄라도 감청 불가 의견은 20대와 40대에서 각각 2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11.7%), 60세 이상(10.5%), 50대(10.2%) 순으로 조사됨.

● 성

n = 1000, 단위: %

보기 성	중대범죄로 인한 감청은 필요	중대범죄라도 감청은 불가	잘 모름
◆ 전체 ◆	68.6	16.6	14.8
남성	70.8	19.1	10.2
여성	66.5	14.2	19.3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중대범죄로 인한 감청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중대범죄로 인한 감청은 필요하다는 의견은 남성(70.8%)이 여성(66.5%)보다 4.3%p 높고, 반면 중대범죄라도 감청 불가하다는 의견은 남성(19.1%)이 여성(14.2%)보다 4.9%p 높음.

3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인식

##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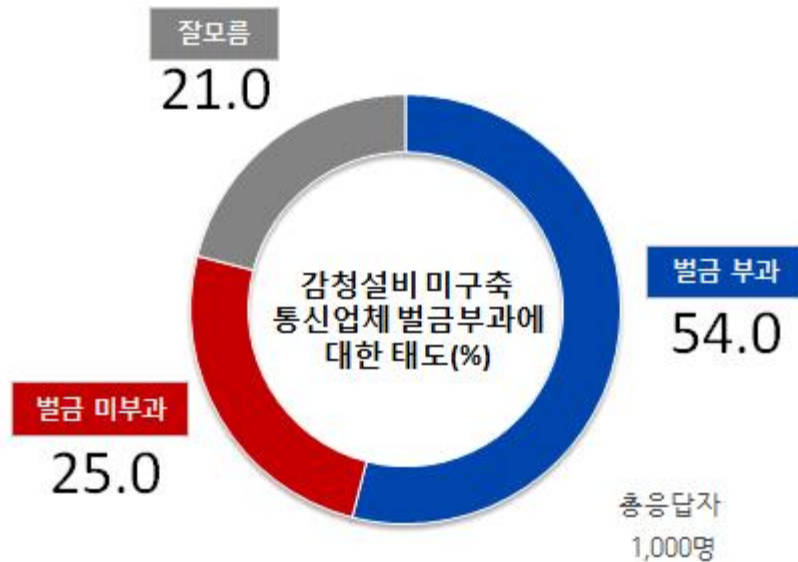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인식

### 1.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 벌금부과에 대한 태도

#### ◆ 전체 분석

#### 문3

주요 선진국은 감청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국도 감청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 벌금 부과 54.0% vs 벌금 미부과 25.0%

- 감청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벌금 부과 해야 한다’ 는 의견이 54.0%, ‘벌금 미부과 해야 한다’ 는 의견은 25.0%로 나타나, 벌금 부과 의견이 벌금 미부과 의견보다 29.0%p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잘 모름’ 은 21.0%.
- 모든 계층에서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야 한다’ 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67.3%), 부산·울산·경남(57.6%), 경기·인천(53.9%)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64.0%)에서 60%이상으로 가장 높음. 반면, ‘벌금 미부과 해야 한다’ 는 의견은 서울(35.8%)과 20대(41.9%)에서 가장 높게 조사됨.

n = 1000, 단위: %

보기 구분	벌금 부과	벌금 미부과	잘 모름
◆ 전체 ◆	54.0	25.0	21.0



◆ 세부 분석

● 지역

n = 1000, 단위: %

보기 지역	벌금 부과	벌금 미부과	잘 모름
◆ 전체 ◆	54.0	25.0	21.0
서울	49.1	35.8	15.0
경기·인천	53.9	22.4	23.7
대전·충청·세종	67.3	17.6	15.1
강원	47.5	27.3	25.1
부산·울산·경남	57.6	28.1	14.3
대구·경북	50.2	26.5	23.2
광주·전라·제주	50.6	12.6	36.8

-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 지역에서 우세한 가운데, 특히 대전·충청·세종(67.3%)에서 벌금 부과 의견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57.6%), 경기·인천(53.9%), 광주·전라·제주(50.6%) 등의 순으로 높음.
- 한편 벌금 미부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울(35.8%)에서 가장 높고, 부산·울산·경남(28.1%), 강원(27.3%), 대구·경북(26.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연령

n = 1000, 단위: %

보기 연령	벌금 부과	벌금 미부과	잘 모름
◆ 전체 ◆	54.0	25.0	21.0
19 ~ 29세	44.5	41.9	13.6
30대	57.1	24.5	18.4
40대	44.8	32.1	23.2
50대	64.0	18.9	17.1
60세 이상	58.8	10.7	30.5

-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50대(64.0%)에서 60%이상으로 가장 높고 이어 60세 이상(58.8%)과 30대(57.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벌금 미부과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에서 41.9%로 가장 높고, 이어 40대(32.1%), 30대(24.5%), 50대(18.9%), 60세 이상(10.7%) 순으로 조사됨.
- 20대에서는 ‘벌금 부과’ 의견이 44.5%, ‘벌금 미부과’ 의견은 41.9%로 나타나, ‘부과’ 의견이 ‘미부과’ 의견보다 2.6%p 더 높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두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됨.

● 성

n = 1000, 단위: %

보기 성	벌금 부과	벌금 미부과	잘 모름
◇ 전체 ◇	54.0	25.0	21.0
남성	58.0	27.9	14.1
여성	50.0	22.1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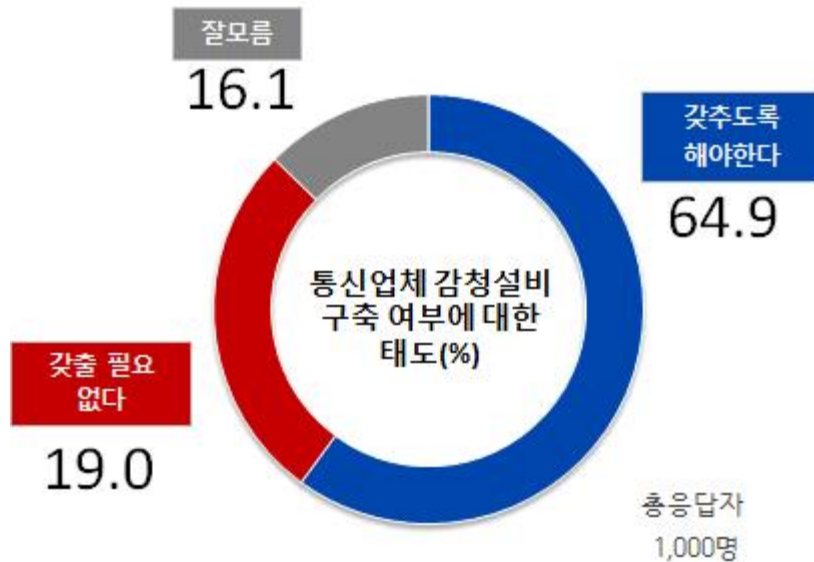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에 벌금을 부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높은 가운데, 특히 남성(58.0%)이 여성(50.0%)보다 8.0%p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벌금 미부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남성(27.9%)이 여성(22.1%)보다 5.8%p 높게 나타남.

## 2. 통신업체 감청설비 구축 여부에 대한 태도

### ◆ 전체 분석

#### 문4

프랑스 국제테러, IS, 간첩사건 등과 같은 중대범죄 해결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SNS와 휴대폰 감청허가를 받았으나, 통신업체가 관련 설비가 없어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신업체 감청설비, 갖추도록 해야 한다 64.9% vs 갖추 필요 없다 19.0%

- 중대범죄 해결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SNS와 휴대폰 감청허가를 받았으나, 통신업체가 관련 설비가 없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체 감청설비 구축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중 6명 이상인 64.9%로 조사된 반면,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 19.0%로 3배 이상의 의견 차이를 보임. '잘 모름'은 16.1%.
- 모든 계층에서 통신업체가 관련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2.6%)과 부산·울산·경남(70.7%)에서 70%대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79.0%)와 60세 이상(75.9%)에서 높은 의견을 나타냄. 반면, 갖추 필요 없다는 의견은 서울(24.9%)과 대구·경북(23.8%), 20대(32.4%)에서 높게 조사됨.

n = 1000, 단위: %

보기 구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갖출 필요가 없다	잘 모름
◆ 전체 ◆	64.9	19.0	16.1

◆ 세부 분석

● 지역

n = 1000, 단위: %

보기 지역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갖출 필요가 없다	잘 모름
◇ 전체 ◇	64.9	19.0	16.1
서울	57.6	24.9	17.5
경기·인천	64.2	18.5	17.3
대전·충청·세종	72.6	15.9	11.5
강원	63.0	21.5	15.5
부산·울산·경남	70.7	16.9	12.3
대구·경북	63.1	23.8	13.1
광주·전라·제주	66.5	10.4	23.2

- 모든 지역에서 관련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대전·충청·세종(72.6%)과 부산·울산·경남(70.7%)에서 7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광주·전라·제주(66.5%), 경기·인천(64.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갖추 필요 없다는 의견은 서울(24.9%)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경북(23.8%), 강원(21.5%)에서 20%이상으로 높음.

● 연령

n = 1000, 단위: %

보기 연령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갖출 필요가 없다	잘 모름
◇ 전체 ◇	64.9	19.0	16.1
19~29세	41.0	32.4	26.6
30대	62.3	20.8	16.9
40대	62.1	27.8	10.1
50대	79.0	10.1	10.9
60세 이상	75.9	6.5	17.6

- 전 연령층에서 통신업체가 관련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가운데, 50대(79.0%)와 60세 이상(75.9%)에서 7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30대(62.3%), 40대(62.1%)에서 높음. 한편 20대(41.0%)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갖추 필요 없다는 의견은 20대(32.4%)에서 가장 높고, 이어 40대(27.8%), 30대(20.8%), 50대(10.1%), 60세 이상(6.5%) 순으로 조사됨.

● 성

n = 1000, 단위: %

보기 성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갖출 필요가 없다	잘 모름
◇ 전체 ◇	64.9	19.0	16.1
남성	65.4	20.4	14.1
여성	64.3	17.6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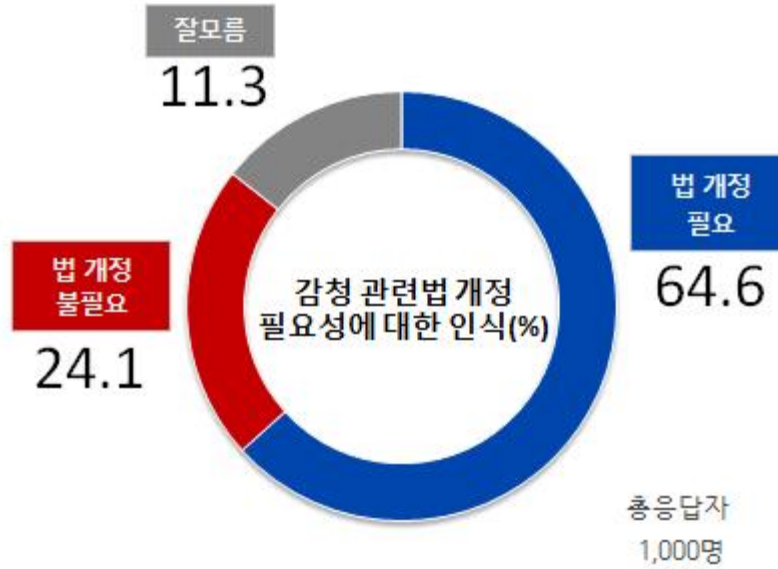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설비를 갖춰야한다는 의견이 6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설비를 갖춰야한다는 의견은 남성(65.4%)이 여성(64.3%)보다 높고, 반면 갖추 필요 없다는 의견은 남성(20.4%)이 여성(17.6%)보다 높음.

### 3. 감청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 ◆ 전체 분석

##### 문5

한국은 안보위협·간첩활동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감청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를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청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청 관련법 개정, 법 개정 필요 64.6% vs 법 개정 불필요 24.1%

- 감청 관련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 이상인 64.6%로 조사된 반면,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4.1%에 그쳐 2배가량의 의견 차이를 보임. ‘잘 모름’은 11.3%.
- 모든 계층에서 과반인 50%이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특히 대전·충청·세종(76.5%)에서 70%이상으로 가장 높고, 연령대별로는 50대(78.9%)와 60세 이상(77.1%)에서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법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은 경기·인천(30.3%)와 40대(38.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n = 1000, 단위: %

보기 구분	법 개정 필요	법 개정 불필요	잘 모름
◆ 전체 ◆	64.6	24.1	11.3

## ◆ 세부 분석

### ● 지역

n = 1000, 단위: %

보기 지역	법 개정 필요	법 개정 불필요	잘 모름
◇ 전체 ◇	64.6	24.1	11.3
서울	61.9	26.0	12.1
경기·인천	61.5	30.3	8.2
대전·충청·세종	76.5	18.1	5.4
강원	64.2	20.6	15.2
부산·울산·경남	67.9	22.1	9.9
대구·경북	67.8	25.1	7.1
광주·전라·제주	59.6	12.7	27.7

- 모든 지역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 법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은 모든 지역에서 크게 높았는데, 특히 대전·충청·세종(76.5%)에서 7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부산·울산·경남(67.9%), 대구·경북(67.8%), 강원(64.2%)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됨.
- 법 개정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경기·인천(30.3%)에서 가장 높고, 이어 서울(26.0%), 대구·경북(25.1%), 대전·충청·세종(18.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 연령

n = 1000, 단위: %

보기 연령	법 개정 필요	법 개정 불필요	잘 모름
◇ 전체 ◇	64.6	24.1	11.3
19~29세	45.0	36.2	18.9
30대	66.5	24.4	9.0
40대	53.0	38.8	8.2
50대	78.9	14.0	7.1
60세 이상	77.1	9.1	13.8

- 모든 연령층에서 법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 법 개정 필요 의견은 50대(78.9%)와 60세 이상(77.1%)에서 70%를 넘었고, 이어 30대(66.5%), 40대(53.0%), 20대(4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법 개정 불필요 의견은 40대(38.8%)에서 가장 높고, 이어 20대(36.2%), 30대(24.4%), 50대(14.0%), 60세 이상(9.1%) 순으로 조사됨.

● 성

n = 1000, 단위: %

보기 성	법 개정 필요	법 개정 불필요	잘 모름
◇ 전체 ◇	64.6	24.1	11.3
남성	68.8	23.5	7.7
여성	60.5	24.6	14.9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법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법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은 남성(68.8%)이 여성(60.5%)보다 8.3%p 높고, 법 개정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성(24.6%)이 남성(23.5%)보다 소폭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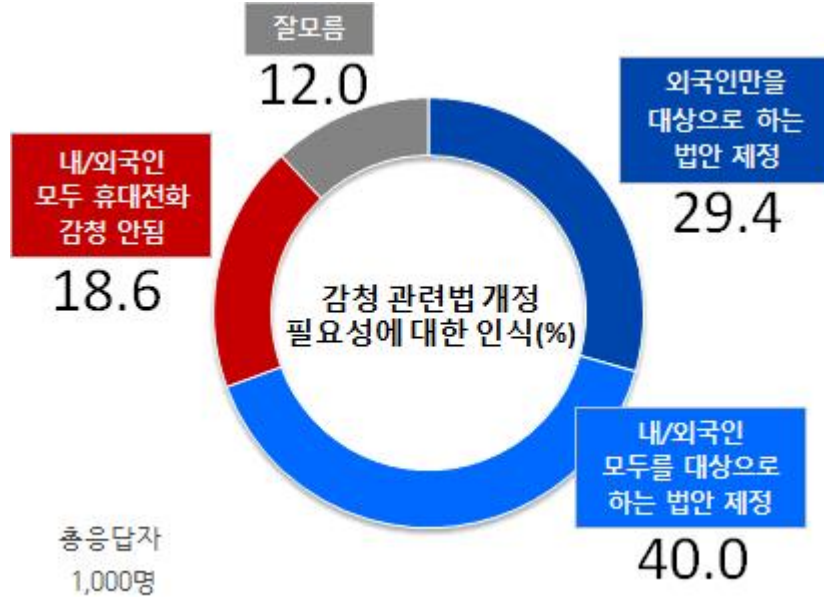


## 4. 휴대전화 감청 법안에 대한 인식

### ◆ 전체 분석

#### 문6

최근 서상기 의원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중대범죄 혐의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휴대전화 감청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휴대전화 감청법안, 내/외국인 모두 대상으로 40.0% vs 외국인만 대상으로 29.4%

- 최근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중대범죄 혐의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휴대전화 감청 관련 법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 제정’ 의견이 40.0%로 가장 높고, 이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제정(29.4%)’, ‘내/외국인 모두 휴대전화 감청을 해서는 안됨(18.6%)’ 순으로 나타남. ‘잘모름’ 은 12.0%.
-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대전·충청·세종(57.4%)에서 50% 이상을 기록해 가장 높고, 이어 서울(42.5%), 부산·울산·경남(40.2%)에서 40%대로 높음.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외국인만을 대상의 법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2.7%로 가장 우세함. 연령별로는 내/외국인 모두 대상으로 법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대(48.4%)에서 가장 높은 반면, 외국인만 대상으로 법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34.3%)와 40대(33.4%) 가장 우세함.

n = 1000, 단위: %

보기 구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	내/외국인 모두 휴대전화 감청을 해서는 안됨	잘 모름
◆ 전체 ◆	29.4	40.0	18.6	12.0

◆ 세부 분석

● 지역

n = 1000, 단위: %

보기 지역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	내/외국인 모두 휴대전화 감청을 해서는 안됨	잘 모름
◇ 전체 ◇	29.4	40.0	18.6	12.0
서울	26.8	42.5	21.3	9.4
경기·인천	30.2	38.0	21.9	10.0
대전·충청·세종	24.2	57.4	12.1	6.3
강원도	12.5	35.8	23.0	28.7
부산·울산·경남	30.1	40.2	16.3	13.4
대구·경북	42.7	31.3	13.5	12.5
광주·전라·제주	28.3	33.7	18.2	19.7

-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한편 대구·경북에서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의 법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전·충청·세종(57.4%)에서 50% 이상을 기록해 가장 높고, 이어 서울(42.5%), 부산·울산·경남(40.2%)에서 40%대로 높게 조사됨.
- 외국인만을 대상의 법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구·경북(42.7%)에서 가장 높고, 이어 경기·인천(30.2%), 부산·울산·경남(30.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연령

n = 1000, 단위: %

보기 연령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	내/외국인 모두 휴대전화 감청을 해서는 안됨	잘 모름
◇ 전체 ◇	29.4	40.0	18.6	12.0
19~29세	15.3	44.4	29.2	11.2
30대	34.3	31.4	19.5	14.8
40대	33.4	32.4	25.2	9.0
50대	32.2	48.4	11.7	7.8
60세 이상	30.3	43.5	9.6	16.6

-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의 법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대(48.4%), 20대(44.4%), 60세 이상(43.5%)에서 가장 우세했고, 40% 이상으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외국인만을 대상의 법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가장 우세했고, 각각 34.3%, 33.4%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내/외국인 모두 휴대전화 감청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20대에서 29.2%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성

n = 1000, 단위: %

보기 성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	내/외국인 모두 휴대전화 감청을 해서는 안됨	잘 모름
◇ 전체 ◇	29.4	40.0	18.6	12.0
남성	30.2	45.9	17.7	6.1
여성	28.6	34.2	19.6	17.7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의 법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의 법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45.9%)이 여성(34.2%)보다 11.7%p 높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도 남성(30.2%)이 여성(28.6%)보다 1.6%p 소폭 높음. 한편 내/외국인 모두 휴대전화 감청 안된다는 의견은 여성(19.6%)이 남성(17.7%)보다 1.9%p 소폭 높음.

# 부록1. 통계표

【 표 1 】 現 감청 대테러활동 불가상황에 대한 인지

[ 문 1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대형 테러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법령미비로 용의자에 대한 합법적 휴대폰 감청과 대테러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례수	알고 있다	몰랐다
■ 전 체 ■	(1000)	38.5	61.5
■ 성 남 ■	(496)	44.0	56.0
■ 성 여 ■	(504)	33.1	66.9
■ 연 령 ■			
19 세 - 29 세 이하	(177)	22.7	77.3
30 세 - 39 세 이하	(185)	40.0	60.0
40 세 - 49 세 이하	(214)	44.4	55.6
50 세 - 59 세 이하	(198)	40.4	59.6
60 세 이상	(226)	42.3	57.7
■ 지 역 ■			
서 울	(202)	37.7	62.3
경 기/인 천	(293)	37.8	62.2
전/충 청/세	(103)	47.4	52.6
강 원	(30)	45.2	54.8
부 산/울 산/경 남	(157)	34.1	65.9
대 구/경 북	(102)	42.7	57.3
광 주/전 라/제 주	(113)	34.1	65.9
■ 중대범죄 감청인식 필요성 ■			
감청 필요함	(687)	38.7	61.3
필요 없음	(166)	36.2	63.8
잘 모름	(148)	40.2	59.8
■ 감청설비미구축업체벌금 ■			
벌금 부과	(540)	38.5	61.5
벌금 미부과	(250)	43.9	56.1
잘 모름	(211)	32.0	68.0
■ 통신업체감청설비구축 필요성 ■			
구축 필요함	(649)	39.1	60.9
구축 불필요함	(190)	41.5	58.5
잘 모름	(161)	32.2	67.8
■ 감청관련법개정필요성 ■			
개정 필요함	(646)	38.6	61.4
개정 불필요함	(241)	40.1	59.9
잘 모름	(113)	34.6	65.4
■ 휴대폰 감청 법안 ■			
외국인만대상법안제정	(294)	31.0	69.0
내/외국인대상법안제정	(400)	40.9	59.1
감청을 해서는 안됨	(186)	44.6	55.4
잘 모름	(120)	39.2	60.8

【 표 2 】 중대범죄 법원심사 전제 감청에 대한 인식

[ 문 2 ] 법원은 중대범죄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감청허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확인된 중대범죄를 감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중대범죄로 한한 감청은 필요하다	중대범죄라도 감청은 불가하다	잘 모름
■ 전 체 ■ (1000)	(1000)	68.6	16.6	14.8
■ 성 남 ■ (496)	(496)	70.8	19.1	10.2
■ 성 여 ■ (504)	(504)	66.5	14.2	19.3
■ 연 령 ■				
19 세 - 29 세 이하	(177)	49.8	25.7	24.5
30 세 - 39 세 이하	(185)	78.1	11.7	10.3
40 세 - 49 세 이하	(214)	68.7	25.7	5.6
50 세 - 59 세 이하	(198)	79.0	10.2	10.8
60 세 이상	(226)	66.6	10.5	23.0
■ 지 서 경 기 / 인 역 ■	(202)	62.9	22.7	14.4
■ 대 전 / 총 청 / 세 전 중 ■	(293)	69.7	13.3	17.0
■ 강 산 / 울 산 / 경 원 남 ■	(103)	76.9	17.2	5.9
■ 부 산 / 울 산 / 경 원 남 ■	(30)	67.7	16.8	15.5
■ 대 구 / 경 남 북 ■	(157)	75.1	19.5	5.4
■ 광 주 / 전 라 / 제 주 ■	(102)	66.8	15.7	17.5
■ 광 주 / 전 라 / 제 주 ■	(113)	61.6	10.5	27.9
■ 감 청 활 동 불 가 상 황 인 지 ■				
■ 알 고 있 다 ■	(385)	69.0	15.6	15.4
■ 몰 띤 다 ■	(615)	68.5	17.2	14.3
■ 감 청 설 비 미 구 축 업 체 벌 금 ■				
■ 벌 금 부 과 ■	(540)	88.9	4.2	6.9
■ 벌 금 미 부 과 ■	(250)	39.4	50.6	10.0
■ 잘 모 르 음 ■	(211)	51.5	8.0	40.6
■ 통 신 업 체 감 청 설 비 미 구 축 ■				
■ 구 축 필 요 ■	(649)	86.3	4.7	9.0
■ 구 축 불 필 요 ■	(190)	39.7	56.6	3.7
■ 잘 모 르 음 ■	(161)	31.8	17.2	50.9
■ 감 청 관 련 법 개 정 필 요 성 ■				
■ 개 정 필 요 ■	(646)	87.3	4.5	8.2
■ 개 정 불 필 요 ■	(241)	34.1	55.2	10.7
■ 잘 모 르 음 ■	(113)	35.7	3.5	60.7
■ 후 대 전 화 감 청 법 안 ■				
■ 외 국 인 대 상 법 안 제 정 ■	(294)	78.4	12.4	9.2
■ 내 / 외 국 인 대 상 법 안 제 정 ■	(400)	83.4	9.9	6.6
■ 감 청 을 해 서 는 안 됨 ■	(186)	36.5	41.7	21.8
■ 잘 모 르 음 ■	(120)	45.4	10.1	44.5

**【 표 3 】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 벌금부과에 대한 태도**

[ 문 3 ] 주요 선진국은 감청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국도 감청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벌금 부과	벌금 미부과	잘 모름
■ 전 체 ■	(1000)	54.0	25.0	21.0
■ 성 남 ■	(496)	58.0	27.9	14.1
■ 성 여 ■	(504)	50.0	22.1	27.9
■ 연 령 ■				
19 세 - 29 세 이하	(177)	44.5	41.9	13.6
30 세 - 39 세 이하	(185)	57.1	24.5	18.4
40 세 - 49 세 이하	(214)	44.8	32.1	23.2
50 세 - 59 세 이하	(198)	64.0	18.9	17.1
60 세 이상	(226)	58.8	10.7	30.5
■ 지 역 ■				
서 울	(202)	49.1	35.8	15.0
경 기/인 천	(293)	53.9	22.4	23.7
대 전/충 청/세 종	(103)	67.3	17.6	15.1
강 구/울 산/경 남	(30)	47.5	27.3	25.1
부 산/울 산/경 남	(157)	57.6	28.1	14.3
대 구/경 북	(102)	50.2	26.5	23.2
광 주/전 라/제 주	(113)	50.6	12.6	36.8
■ 감 청 활 동 불 가 상 황 인 지 ■				
알 고 있 다	(385)	54.0	28.5	17.5
몰 락 다	(615)	54.0	22.8	23.3
■ 중 대 범 죄 감 청 인 식 ■				
감 청 필 요	(687)	69.9	14.3	15.8
감 청 불 필 요	(166)	13.8	76.1	10.1
잘 모 름	(148)	25.2	16.9	57.9
■ 통 신 업 체 감 청 설 비 구 축 ■				
구 축 필 요	(649)	69.2	13.1	17.8
구 축 불 필 요	(190)	20.2	75.7	4.1
잘 모 름	(161)	32.7	13.0	54.3
■ 감 청 관 련 법 개 정 필 요 성 ■				
개 정 필 요	(646)	72.4	11.2	16.4
개 정 불 필 요	(241)	19.2	69.1	11.7
잘 모 름	(113)	22.6	10.0	67.4
■ 휴 대 전 화 감 청 법 안 ■				
외 국 인 만 대 상 법 안 제 정	(294)	64.4	20.6	15.0
내 / 외 국 인 대 상 법 안 제 정	(400)	68.3	18.8	12.9
감 청 을 해 서 는 안 됨	(186)	26.3	55.8	17.8
잘 모 름	(120)	23.4	8.2	68.4

**【 표 4 】 통신업체 감청설비 구축 여부에 대한 태도**

[ 문 4 ] 프랑스 국제테러, IS, 간첩사건 등과 같은 중대범죄 해결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SNS와 휴대폰 감청허가를 받았으나, 통신업체가 관련 설비가 없어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갖출 필요가 없다	잘 모름
■ 전 체 ■	(1000)	64.9	19.0	16.1
■ 성 남 여 ■	(496) (504)	65.4 64.3	20.4 17.6	14.1 18.1
■ 연 령 ■				
19 세 - 29 세 이하	(177)	41.0	32.4	26.6
30 세 - 39 세 이하	(185)	62.3	20.8	16.9
40 세 - 49 세 이하	(214)	62.1	27.8	10.1
50 세 - 59 세 이하	(198)	79.0	10.1	10.9
60 세 이상	(226)	75.9	6.5	17.6
■ 지 서 경 대 강 부 대 광 ■				
역	(202)	57.6	24.9	17.5
직	(293)	64.2	18.5	17.3
업	(103)	72.6	15.9	11.5
종	(30)	63.0	21.5	15.5
원	(157)	70.7	16.9	12.3
남	(102)	63.1	23.8	13.1
북	(113)	66.5	10.4	23.2
주				
제				
주				
■ 감 청 활 동 불 가 상 황 인 지 ■				
알	(385)	66.0	20.5	13.5
고	(615)	64.2	18.1	17.8
있				
다				
■ 중 대 범 죄 감 청 인 식 ■				
필	(687)	81.5	11.0	7.5
요	(166)	18.5	64.8	16.8
불	(148)	39.5	4.8	55.7
필				
요				
■ 감 청 설 비 미 구 축 업 체 벌 금 ■				
부	(540)	83.1	7.1	9.8
과	(250)	34.0	57.6	8.4
과	(211)	54.7	3.7	41.7
■ 감 청 관 련 법 개 정 필 요 성 ■				
필	(646)	86.2	4.8	9.0
요	(241)	19.9	64.0	16.2
불	(113)	38.3	4.5	57.2
필				
요				
■ 휴 대 전 화 감 청 법 안 ■				
안	(294)	78.0	11.8	10.3
제	(400)	80.5	10.9	8.6
정	(186)	24.5	57.6	17.9
■ 감 청 을 해 서 는 안 됨 ■				
불	(120)	42.9	3.9	53.2
필				
요				



【 표 5 】 감청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문 5 ] 한국은 안보위협·간첩활동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감청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를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청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필요	불필요	잘 모름
■ 전 체 ■	(1000)	64.6	24.1	11.3
■ 성 남 ■	(496)	68.8	23.5	7.7
■ 성 여 ■	(504)	60.5	24.6	14.9
■ 연 령 ■				
19 세 - 29 세 이하	(177)	45.0	36.2	18.9
30 세 - 39 세 이하	(185)	66.5	24.4	9.0
40 세 - 49 세 이하	(214)	53.0	38.8	8.2
50 세 - 59 세 이하	(198)	78.9	14.0	7.1
60 세 이상	(226)	77.1	9.1	13.8
■ 지 역 ■				
서 울	(202)	61.9	26.0	12.1
경 기/인 천	(293)	61.5	30.3	8.2
대 전/충 청/세 종	(103)	76.5	18.1	5.4
강 구/원 주	(30)	64.2	20.6	15.2
부 산/울 산/경 남	(157)	67.9	22.1	9.9
대 구/경 북	(102)	67.8	25.1	7.1
광 주/전 라/제 주	(113)	59.6	12.7	27.7
■ 감 청 활 동 불 가 상 황 인 지 ■				
알 고 있 다	(385)	64.8	25.1	10.1
몰 락 다	(615)	64.5	23.4	12.0
■ 중 대 범 죄 감 청 인 식 ■				
감 청 필 요	(687)	82.2	12.0	5.9
감 청 불 필 요	(166)	17.5	80.1	2.4
잘 모 름	(148)	36.0	17.4	46.5
■ 감 청 설 비 미 구 축 업 체 벌 금 ■				
벌 금 부 과	(540)	86.7	8.6	4.7
벌 금 미 부 과	(250)	28.9	66.6	4.5
잘 모 름	(211)	50.5	13.3	36.2
■ 통 신 업 체 감 청 설 비 미 구 축 ■				
구 축 필 요	(649)	85.9	7.4	6.7
구 축 불 필 요	(190)	16.3	81.0	2.7
잘 모 름	(161)	35.9	24.1	40.0
■ 휴 대 전 화 감 청 법 안 ■				
외 국 인 만 대 상 법 안 제 정	(294)	73.1	19.3	7.6
내 / 외 국 인 대 상 법 안 제 정	(400)	87.1	9.8	3.1
감 청 을 해 서 는 안 됨	(186)	14.3	70.6	15.1
잘 모 름	(120)	47.2	11.1	41.7

【 표 6 】 휴대전화 감청 법안에 대한 인식

[ 문 6 ] 최근 서상기 의원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중대범죄 혐의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휴대전화 감청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	내/외국인 모두 휴대전화 감청을 해서는 안 됨	잘 모름
■ 전 체 ■	(1000)	29.4	40.0	18.6	12.0
■ 성 남 여 ■	(496) (504)	30.2 28.6	45.9 34.2	17.7 19.6	6.1 17.7
■ 연 령 ■					
19 세 - 29 세 이하	(177)	15.3	44.4	29.2	11.2
30 세 - 39 세 이하	(185)	34.3	31.4	19.5	14.8
40 세 - 49 세 이하	(214)	33.4	32.4	25.2	9.0
50 세 - 59 세 이하	(198)	32.2	48.4	11.7	7.8
60 세 이상	(226)	30.3	43.5	9.6	16.6
■ 지 역 ■					
경 기/인 천	(202) (293)	26.8 30.2	42.5 38.0	21.3 21.9	9.4 10.0
대 전/충 청/세 중	(103)	24.2	57.4	12.1	6.3
강 구/경 남	(30)	12.5	35.8	23.0	28.7
대 산/울 산/경 남	(157)	30.1	40.2	16.3	13.4
부 구/경 북	(102)	42.7	31.3	13.5	12.5
광 주/전 라/제 주	(113)	28.3	33.7	18.2	19.7
■ 감 청 활 동 불 가 상 황 인 지 ■					
알 고 있 다	(385)	23.7	42.5	21.6	12.2
몰 락 하 다	(615)	33.0	38.4	16.8	11.8
■ 중 대 범 죄 감 청 인 식 ■					
감 청 필 요 함	(687)	33.6	48.6	9.9	7.9
감 청 불 필 요 함	(166)	21.9	23.9	46.9	7.3
잘 모 르 음	(148)	18.4	18.0	27.6	36.0
■ 감 청 설 비 미 구 축 업 체 벌 금 ■					
벌 금 부 과	(540)	35.1	50.7	9.1	5.2
벌 금 미 부 과	(250)	24.3	30.1	41.7	3.9
잘 모 르 음	(211)	20.9	24.4	15.8	38.8
■ 통 신 업 체 감 청 설 비 미 구 축 ■					
구 축 필 요 함	(649)	35.4	49.7	7.1	7.9
구 축 불 필 요 함	(190)	18.2	22.9	56.5	2.5
잘 모 르 음	(161)	18.7	21.3	20.7	39.3
■ 감 청 관 련 법 개 정 필 요 성 ■					
개 정 필 요 함	(646)	33.2	53.9	4.1	8.7
개 정 불 필 요 함	(241)	23.5	16.3	54.7	5.5
잘 모 르 음	(113)	19.9	11.1	24.9	44.2

## 부록2. 설문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2015년 11월 20일 ~ 21일 (10:00~22:00)

n = 1,000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입니다. 저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에 따라, 선생님의 응답은 개인별로 분석·공표되지 않고 철저히 비밀로 처리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기초문항 ◆

연령. 선생님의 연령이 19세 미만이면 1번(☞ 맞음말2 조사중단), 19세 이상 29세 이하면 2번, 30대면 3번, 40대면 4번, 50대면 5번, 60세 이상은 6번을 눌러주십시오.



## ◆ 現 감청 대테러활동 불가상황에 대한 인지 ◆

문1.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대형 테러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법령미비로 용의자에 대한 합법적 휴대폰 감청과 대테러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1번. 알고 있다
- 2번. 몰랐다

## ◆ 중대범죄 법원심사 전제 감청에 대한 인식 ◆

문2. 법원은 중대범죄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감청허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확인된 중대범죄를 감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중대범죄로 한한 감청은 필요하다
- 2번. 중대범죄라도 감청은 불가하다
- 3번. 잘 모르겠다

## ◆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 벌금부과에 대한 태도 ◆

문3. 주요 선진국은 감청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국도 감청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 2번. 벌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 3번. 잘 모르겠다

## ◆ 통신업체 감청설비 구축 여부에 대한 태도 ◆

문4. 프랑스 국제테러, IS, 간첩사건 등과 같은 중대범죄 해결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SNS와 휴대폰 감청허가를 받았으나, 통신업체가 관련 설비가 없어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통신업체는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 2번. 통신업체는 설비를 갖추 필요가 없다
- 3번. 잘 모르겠다

## ◆ 감청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문5. 한국은 안보위협·간첩활동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감청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를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청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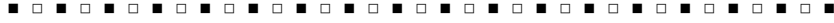
- 1번. 법 개정이 필요하다
- 2번.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
- 3번. 잘 모르겠다

## ◆ 휴대전화 감청 법안에 대한 인식 ◆

문6.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서상기 의원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중대범죄 혐의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휴대전화 감청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번.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 2번.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 3번. 내·외국인 모두 휴대전화 감청을 해서는 안 된다
- 4번. 잘 모르겠다



◆ 기초문항 ◆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

지역. 선생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1번. 서울       | 2번. 경기/인천    | 3번. 대전/충청/세종 |
| 4번. 강원       | 5번. 부산/울산/경남 | 6번. 대구/경북    |
| 7번. 광주/전라/제주 |              |              |

성. 선생님께서 남성이면 1번, 여성이면 2번을 눌러 주십시오.

**맺음말1)**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13-6번지에 소재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맺음말2)**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사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